

광주형 일자리·흑산공항 등 해 넘기는 지역현안 ‘수두룩’

민간공원 2단계·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내년엔 해결해야

민선 7기를 맞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 사업을 풀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에 산적해 있다.

광주시는 올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재개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실마리를 풀어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을 받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논란 등은 내년에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다만, 농업 분야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공모에 탈락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고, 흑산공항 사업도 환경문제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광주시=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해를 넘기게 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내년 초에라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위해 3000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해줬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다만, 한 노무 전문가는 “지역노동계가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대

승적으로 양보하고 현대차가 대주주로서의 책임감 있게 현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동력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가 무려 369억원의 합의금을 내놓고 2028년까지 1014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며 사실상 허위사실을 발표한 ‘민선 6기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또한 민선 7기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근, 맥쿼리 임원과 그들이 소개한 전문가가 협약 변경에 깊숙이 개입해 광주시의 재정절감 규모를 줄이고 맥쿼리의 수익 유지에만 기여했다는 광주일보 보도(2018년 12월 3일~12월 11일자)가 계속되면서 변경 협약 전반을 검증하고,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논란 역시 광주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밀서류의 외부 사전 유출 원인과 최종 전달자, 감사 착수 이유, 시 감사위의 지나친 행정 개입에 대한 입장,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전남도는 올해 1800억원대

규모의 최대 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에 탈락하면서 내년 사업 공모를 기약하게 됐다. 이번 사업 탈락은 ‘농도’(農道)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고,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장관인 이개호 국회의원이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에 빠졌다. 전남은 전국 제1의 농지 면적과 작물 생산지이지만, 농업 첨단화와 기술집약은 이뤄지지 않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전남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과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치밀하게 사업을 준비했던 만큼 내년 사업에 다시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 현안사업이었던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 추진도 해를 넘기게 됐다.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선 탓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올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남도와 신안군, 지역주민들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경제성,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것인 만큼 반대 논리를 해소할 객관적 자료 등을 보완해 내년에 다시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귀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 착공식 대북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될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남북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의 승

인이 필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민선7기 들어 광주시가 ‘광주다움’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삭막한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는 광주의 모습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양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동문대로 초입에서 바라본 광주시 전경. 높다란 콘크리트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 시야를 가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초고층 성냥갑 아파트가 ‘광주다움’ 인가

무등산·광주천 주변 등에 40층 넘는 고층 건축물 추진
민선 7기 팔짱끼고 있는 사이 건설업체 총력전 나선 듯

‘광주다움’을 강조한 민선 7기에서 오히려 기존 높이를 넘어서는 고층 주거시설(아파트+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 관문, 무등산 및 광주천 주변 등은 물론 도심 상업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이들 고층 주거시설들은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높이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고층주거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가 지역건설업체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서둘러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2018년 제13회 건축위원회에 서구 화정동 23~26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6층 규모의 2개 건축물을 지어 아파트 724세대(80%), 오피스텔 152호(20%)를 공급하겠다는 건축계획안이 접수됐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들은 재검토를 결정했으나 시는 오는 28일 다시 위원회를 열어 이 계획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일부 건축위

원들은 같은 안건을 10여 일만에 재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시는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건축위원들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축계획안에서 용적률은 무려 536% 내외로,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 560%에서 14% 정도만 낮췄다.

광주에는 지난해 말 현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26곳에 170개동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22곳 160개동에 달한다. 재개발·재건축, 도심 외곽의 택지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들어서고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30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그 수는 200개동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고층 아파트들이 모두 사각형의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축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건축물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광주의 정체성과 문화도시 이미지 저해, 주변 중저층과의 부조화, 인구 집적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 도시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근 상업지역내 용적률을 조정하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체의 반대에 부딪혀 급선회했다. 12월 개정안을 광주시의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 7기에서 ‘광주다움’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고층화에 대한 시의 분명한 대책을 기대했으나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 수년 내에 광주의 경관이 완전히 고층아파트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64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음악부 지정곡 ▶17면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위기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도 시행

- 지원내용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매월 1만원씩 광주시에서 장려금 지원(최대 12회)
- 지원대상 | 광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신청방법 |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매월 5만원씩 5년 납부할 경우 폐업 등 위기 시 약 333만원수령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무료 자문, 휴양시설, 제휴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 1666-9988(대표번호) / 062)955-0037(광주전남지역본부) www.8899.or.kr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